Global Market Report 19-092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

kotra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주요국 동향 및 현지 반응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약

Ⅰ. 현황 / 1

1 | 1. 미국의 개도국 혜택 중단 발표
2 | 2. WTO 개도국 특별대우(S&D) 현황

Ⅱ. 주요국 반응 / 4

4 | 1. 미국
5 | 2. 중국
8 | 3. 터키
9 | 4. 멕시코
10 | 5. 아랍에미리트(UAE)
12 | 6. 싱가포르
13 | 7. 카타르
13 | 8. 쿠웨이트
14 | 9. 홍콩
15 | 10. EU

Ⅲ. 향후 전망 / 16

요 약

□ 트럼프 대통령,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관련 대통령 메모 발표('19.7.26)

○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통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국가로 총 11개국*을 지목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지시

*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한국, 터키, 중국

○ 발표 60일 내 진행 상황 보고, 발표 90일 내 진전 없을 시 개도국 지위 혜택 부여 중단

□ 대상국으로 지목된 11개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입장 정립 중

○ (중국) 아직 선진국과 경제 수준 격차 존재, 개도국 지위 필요 입장

○ (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

○ (홍콩) 개도국 혜택 수혜 의향 無

○ (멕시코) 중립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

○ (터키·카타르·쿠웨이트) 공식 입장 표명 부재

□ 이번 미국의 발표는 미중 통상분쟁 연장선상에서 중국 압박용, 향후 미국의 WTO 탈퇴를 위한 포석, WTO 체제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다양한 견해 존재

□ 자기 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은 WTO 오랜 관행으로, 중국·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 총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는 WTO에서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개도국 지위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도 대비책 마련 필요

I 현황

1 미국의 개도국 혜택 중단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관련 대통령 메모* 발표('19.7.26)

○ USTR에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자기 선언 방식을 통해 개도국 지위 혜택을 누리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

*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는 행정부처에 정책 집행 절차, 정책 방향, 과제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지시 수단으로, 행정명령 대비 법적 우선순위는 낮음.

□ (근거) 1인당 GDP 상위국, G20 및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WTO 개도국 지위 통해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총 11개국을 지목

① 1인당 GDP 10위권 국가 :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7개국

② G20 회원국이자 OECD 가입 국가 : 멕시코, 한국, 터키 3개국

③ 전 세계에서 가장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 : 중국

* 중국의 對세계 총수출은 '95년→'17년 5배 증가, 첨단제품 수출은 '95년→'16년 3,800% 증가

	1인당 GDP (달러, 2017년 기준)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 (달러, 2017년 기준)	G20 회원국 여부	OECD 가입국 여부	전 세계 상품수출 비중 (%, 2018년 기준)
브루나이	28,278.4*	78,970.8*	x	x	0.03
홍콩	46,091.2	61,528.6	x	x	3.0**
쿠웨이트	26,863.3*	66,197.4*	x	x	0.3
마카오	77,414.5	110,592.4	x	x	0.03
카타르	62,826	127,785.3	x	x	0.3
싱가포르	59,990	95,507.8	x	x	2.0
아랍에미리트	37,732.6*	68,639.4*	x	x	1.5
멕시코	9,376.9	19,948.5	○	○	2.4
한국	29,749.7	39,548	○	○	2.9
터키	10,537.1	27,049	○	○	1.0
중국	8,677.4	16,682.4	○	x	11.8

자료원 : IMF(* 예측치), WTO(** 재수출 포함)

□ **(지시내용)** USTR에 대통령 메모 발표 60일('19.9.24限) 안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90일('19.10.24限) 안에 근본적인 진전 없을 시 부적절하게 개도국으로 선언한 회원국에 대한 혜택 중단 지시

① USTR은 자기 선언 방식에 근거한 개도국 지위 부여 방식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유사 의견을 가진 WTO 회원국과 협력할 것

② 조치 결정 전 국가안보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 등과 협의할 것

③ 향후 개도국 지위 보유 부당 국가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

2 WTO 개도국 특별대우(S&D) 현황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는 개도국을 다자간 무역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비차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개도국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

□ **(관련 조항)** 현재 1994년 GATT, 농업협정, 위생 및 검역 협정 등 WTO 내 다양한 협정 안에 155개 조항으로 포함

- ○ 협정 이행 시, 추가적인 이행 및 유예 기간 부여(농업, 서비스)
- ○ 개도국의 무역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 접근의 폭 확대(섬유, TBT)
- ○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적용 시, 개도국의 이익 고려
- ○ 무역개발위원회에서 개도국 관련 과제를 이행 및 검토하고, WTO 사무국은 개도국에 훈련 및 교육 등 기술적 지원

□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 특정한 법적 절차나 기준 없이 회원국의 자기 선언(self-declared)에 의해 결정. 자기 선언 시, 기타 회원국의 묵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이의 제기 가능

○ (국가구분)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으로 구분*. 91개국이 개도국 지위

* WTO 총 회원국(164개국) 중 선진국 37개국, 개도국 91개국, 최빈국 36개국. 선진국은 캐나다·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EU(28개국)·EFTA(4개국). 최빈개도국 지위는 UN 최빈국 명부 근거

□ **(한국)**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 이외에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

○ 공산품・서비스 분야에서는 선진국,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

[참고]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상실 시 영향

□ WTO 농업 협상은 농산물 관세,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차로 2008년 12월 이후 10여년 이상 중단

○ 차기 농업 협상의 개시 여부나 일시 등은 미정이며,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이 차기 농업 협상 타결 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

□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고 농업 협상 세부원칙('08년 12월 기준)대로 타결될 시 관세 인하, 국내 보조금, 수출 보조금에 영향

○ 관세 구간별 인하율 : 선진국 50-70%, 개도국 33.3-46.7%

- (예)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관세율 513%인 쌀은 선진국 4구간에 해당되어 (70% 인하율) 154%까지 인하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현행 관세수준	인하율	현행 관세수준	인하율
1구간	0< 양허관세 ≦20%	50%	0< 양허관세 ≦30%	33.3%
2구간	20< 양허관세 ≦50%	57%	30< 양허관세 ≦80%	38.0%
3구간	50< 양허관세 ≦75%	64%	80< 양허관세 ≦130%	42.7%
4구간	양허관세 > 75%	70%	양허관세 > 130%	46.7%

* 자료원 : 농림축산식품부('14.6) WTO DDA 농업 부문 협상 현황

○ 관세 인하 기간 단축 :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 개도국 특별품목 조항 활용 불가 : 농산물 세번의 12%(품목수 기준)에 해당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 가능

* 특별품목은 11% 인하율만 달성하면 되며, 세번의 5%까지는 관세 인하 면제

* 한국의 농산물 세번은 총 1,600개(HS 10단위). 상위 5개 품목(세번수 103개)이 총 농업 생산액의 52% 차지, 주요 품목을 관세 인하 면제 품목으로 지정 가능

○ 국내 보조금 인하율 상승, 인하 기간 단축 : 선진국은 5년간 45% 인하, 개도국은 8년간 30% 인하

* 현재 1조 4,900억 원의 농업 보조금이 선진국 지위 시 8,195억 원, 개도국 지위 시 1조 430억 원으로 인하

○ 국내외 운송, 마케팅 비용 등 농업 수출 보조금 유지 불가 : 선진국은 2015년 말 旣철폐, 개도국은 2023년까지 유지 가능

Ⅱ 주요국 반응

1 미국

□ **(언론)**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레버리지 목적

○ (Wall Street Journal) 미중 무역협상('19.7.30-31, 상하이)을 앞두고 발표된 이번 대통령 메모는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경고를 통해 중국을 압박한 것이라 보도

○ (Washington Trade Daily) 미국의 해당 명령에 대해 WTO에서 합의 도출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명령

○ (New York Times) WTO를 배제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혜택 중단만으로도 타격은 가능하며, 미국이 중국을 넘어선 글로벌 통상분쟁을 촉발시킬 소지도 있다고 지적

□ **(학계)** 향후 미국의 WTO 탈퇴를 위한 명분 쌓기

○ (미국기업연구원) 중국을 자극하고 WTO 탈퇴를 위한 명분 쌓기용 혹은 WTO 체제 무력화 목적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미국이 언젠가 WTO 탈퇴를 실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WTO 체제 내에서 미국의 개도국 대우 중단 효과는 매우 적을 것

2 중국 (2011년 WTO 가입)

□ **(정부)** 중국은 아직 선진국과 경제 수준 격차가 있어 개도국 지위가 필요하다는 입장

○ (상무부) 미국이 일방주의·패권주의 등 잘못된 생각을 버리길 희망하며, 중국은 개도국 지위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19.8.1)[1]

-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관련 메모는 WTO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힘.
-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이고, 다방면*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데 여전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주장

  * '00~'16년간 미·중간 1인당 소득격차는 4만 3천 달러에서 4만 6천 달러로 증가,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 비중이 7%로 여타 중소득 국가보다 높은 편

- 중국은 책임감 있는 개도국으로서 경제 발전 수준과 능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질 것이며, 다른 개도국 회원국과 함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키고 WTO 개혁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

○ (외교부) 개도국 특별대우는 WTO의 핵심 가치이자 기본 원칙으로, 중국은 WTO에 기여해왔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발표에 반대 입장 표명('19.7.29)[2]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WTO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전체 회원국의 보편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개도국의 지위 보호를 통해 진정한 무역의 공정성이 이뤄질 수 있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회원국의 발전 수준을 과장해 이미 수많은 개도국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비난

---

1) http://www.mofcom.gov.cn/xwfbh/20190801.shtml
2)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684203.shtml

○ (유엔주재 중국 대사) 개도국 지위 유지를 통해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3)

-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개도국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일련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불균형 발전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개도국이라고 주장

□ **(언론)** 중국의 WTO 의무 준수를 주장하며, 개도국 지위 유지 입장을 지지하는 다수의 보도

○ (인민일보) WTO의 개도국 지위가 미국의 이익에 따라 정의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과 여전한 격차가 존재. 90일이란 시한 또한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과 무시

○ (환구시보)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과학기술 발전이나 경제구조, 사회관리, 산업경쟁력 등에서도 격차 존재

○ (중국경제망)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며,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하여 수천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등 중국의 WTO 가입을 통해 오히려 미국이 이득을 본 것이라고 주장

○ (CCTV 국제예평) 미국의 이번 발표는 중국을 지속 압박하려는 시도이며, 이를 통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의제에서 더 많은 요구를 제시하려는 의도

- 미중 격차의 본질은 세계 최대 선진국과 세계 최대 개도국 간 격차로, 미국이 단일지표로 개도국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

---

3)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9/07/id/4234791.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40543227380196301&wfr=spider&for=pc

□ **(학계)** 미중 통상분쟁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 국제관계학자이자 중국해양대학 특별초빙교수 겸 해양발전연구원장 팡중잉(龐中英)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발표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된 것으로 미국이 세계 무역 규범을 깨려는 것이라고 밝힘. 또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 상무부 산하 연구원 대외무역연구소 량밍(梁明) 소장은 미국의 행위는 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무책임하고 패권적인 행위라고 밝힘. 미국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현재 세계 무역 체제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첨언

○ 국제문제연구소 롼중저(阮宗澤) 연구원은 중국은 다방면에서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밝히며, 중국은 책임감 있는 개도국으로서 WTO 가입 약속을 전면 이행하는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해 세계 무역과 투자 자유화 추진에 기여했다고 주장

□ **(전망)**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부여 중단 발표에 대해 중국 정부 및 언론은 매우 강경한 상황

○ 중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중 통상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WTO 특성상 개도국 체제 개편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을 중심으로 WTO 불신론이 커져가는 가운데 WTO 체제에 대한 혼란과 위기감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

3 터키 (2011년 WTO 가입)

□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한 대외 입장 표명은 부재

○ 미국의 WTO 개도국 혜택 중단 발표에 대해 터키 내 특별한 반응은 없음.

□ **(언론)** 소수 언론에서만 미중 통상분쟁의 일환으로 간주해 사실 전달 위주로 보도 중으로 터키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은 없음.

○ (Anadolu Agency) 터키 관영언론으로, 미중 통상분쟁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에서 중국, 터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개도국 혜택 중단 조치를 추진 중이라 보도

○ (Sputnik News) 미국 측에서 중국, 터키 등 국가에 대해 WTO 개도국 혜택 부여를 재검토 중이라고 보도

□ **(전망)** 터키 정부 및 산업계는 최근 터키-미국 양국 통상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교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낙관 전망 중

○ 미국의 터키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종료('19.5.17), WTO 개도국 혜택 중단 조치 발표('19.7.26) 등 양국 간 교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지난 6월 G20 정상회의 시 양국이 합의한 교역 규모 확대를 추진 중(기존 250억 달러 → 1,000억 달러)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미국은 1976년 도입하였으며, 약 120여개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등의 혜택 부여

4 멕시코 (1995년 WTO 가입)

□ **(정부)**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WTO 개발도상국 재지정 관련 개혁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

○ 루스 마리아 데 라 모라(Luz María de la Mora) 경제부 차관은 해당 조치가 세계 무역 체제 내에서 개도국의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

○ 빅토르 아길라르 페레즈(Víctor Aquilar Pérez) 국제협력실장은 WTO가 규정에 근거하여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

□ **(언론)** 대상 개도국에 대한 미국의 조치 관련 양립적인 견해 존재

○ (Reforma) 미국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양자적으로 개도국 지위 부여 중단을 압박할 가능성이 낮다는 낙관적 견해를 밝힘.

○ (El Economista) 이번 조치가 세계 GDP 제2위 국가인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며, WTO 개혁 건과 별도로 미국의 對중국 및 대상 개도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

□ **(학계)** 미국의 목적이 WTO 체제 무력화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

○ 멕시코 판아메리카대학교 후안 까를로스 베이커(Juan Carlos Baker) 교수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 WTO 개도국에서 멕시코 제외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前 NATFA 자문 경제학자인 케네스 스미스(Kenneth Smith)는 미국이 이번 WTO 개도국 혜택 중단 조치 도입 요청 이외, WTO 분쟁해결 제도,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농후하다고 밝힘.

□ **(전망)** 멕시코는 현 상황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조치로 멕시코 경제에 급격한 파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단,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경제, 정치, 사회 등 다방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멕시코 정부는 해당 조치 발표에 대해 중립적이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내용 트위터 게시('19.7.26) 이틀 뒤('19.7.28)에도 멕시코 페소화는 안정적인 수준 유지

○ 멕시코 언론 및 전문가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보다 여타 대상 개도국의 반응을 살피는 추세

○ 해당 조치로 멕시코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하 멕시코에 대한 새로운 무역제재나 경제적 압박 가능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5 아랍에미리트(UAE) (1996년 WTO 가입)

□ **(정부)** UAE 연방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는 이번 미국의 WTO 개도국 특혜에 대한 지적이 자국의 WTO 의무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19.7.29)

○ UAE는 1996년 WTO 가입 이후,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이행 사항을 계획대로 완료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발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단, 미국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은 WTO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

○ UAE는 WTO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발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힘.

□ **(언론)** 별다른 논평 없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

○ 주요 언론사인 Gulf News 및 Al Khaleej 두 곳에서만 관영 언론 매체인 WAM[4])에서 보도한 연방 경제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를 게재

□ **(업계)** 현지 수출기업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WTO 개도국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 현지 법무법인에서도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더라도 제조업 기반이 크지 않은 UAE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전망) 아랍에미리트는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

○ UAE 연방 경제부에서 WTO의 결정 사항을 따를 의사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WTO 내 결정에 따라 개도국 지위 여부가 결정될 것

○ UAE는 중동 지역 내 최대 무역의 중심지로 무역 개방도가 높고 자국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WTO 개도국 지위 중단으로 인한 특혜를 잃는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4) http://wam.ae/en/details/1395302777491

6 싱가포르 (1995년 WTO 가입)

□ **(정부)**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싱가포르가 WTO 가입 이후 개도국 특별대우(S&D) 혜택을 누리지 않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언급[5)]

○ 찬춘싱(陳振聲) 통상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변경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 특별대우(S&D) 혜택을 포기하라고 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힘.

○ 지난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리셴룽(李顯龍) 총리는 WTO 회원국들이 건설적인 개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등 다자간 무역 체제 개선을 강조[6)]

□ **(학계)**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통상학과 대빈 초올(Davin Chor)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이미 수입품에 대해 최소한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매우 개방적인 무역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압박으로 개도국에서 제외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전망) 싱가포르는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

○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5) https://www.straitstimes.com/business/singapore-says-us-understands-its-position-on-wto-privileges
6) https://www.todayonline.com/singapore/prime-minister-lee-hsien-loong-advocates-strengthening-international-trading-system

7 카타르 (1996년 WTO 가입)

□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한 대외 입장 표명은 부재

□ **(언론)** 카타르 정부 입장이나 카타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보다 미중 양국의 반응을 담은 외신을 차용하여 보도

○ 국영언론사 Al Jazeera와 민간언론사 Gulf Times, Qatar Tribune 등은 Bloomberg, AFP 등 외신에서 보도한 기사를 특별한 견해 없이 그대로 보도

□ **(업계)** 카타르상의(Qatar Chamber)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부재

□ **(전망)** 정부의 공식 의견 표명이 없어 당분간 관망

8 쿠웨이트 (1995년 WTO 가입)

□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한 대외 입장 표명은 부재

□ **(언론)**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쿠웨이트 경제 구조 상 미국의 발표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보도

○ (Kuwait Times) 쿠웨이트 경제는 원유의 수출 및 판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Alqabas) 쿠웨이트 경제가 원유의 수출과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치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

○ (Alraimedia)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서 걸프 국가들을 도구로 삼고 있으며, 쿠웨이트를 개도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비논리적이라고 지적

□ **(업계)** 쿠웨이트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이 없는 바이어들이 대다수

□ **(전망)** 쿠웨이트는 중동에서도 손꼽히는 친미 국가로 미국의 해당 발표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나, 공식적으로 어떠한 반대 의견도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의 WTO 개도국 혜택 중단 조치가 쿠웨이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9 홍콩 (1995년 WTO 가입)

□ **(정부)** 홍콩 상무경제발전부(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 에드워드 야우(Edward Yau) 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개도국 지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독자적인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

○ 홍콩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로 무역 관련 협의에서 혜택을 받으려는 의향이 없으며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지역임을 강조

□ **(언론)** 개도국 유지 입장에 대해 다양한 견해 존재

○ (South China Morning Post)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부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지만,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추진

○ (ET Net(經濟通)) WTO 개도국 지위 부여와 관련해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67%는 홍콩의 WTO 개도국 지위 개선에 반대

□ **(학계)** 홍콩대 아시아 연구소(港大亞洲環球硏究所)의 진지무(陳志武) 소장은 WTO 개도국 지위 부여 방식을 통해 미국이 경제 보복을 가해도 홍콩은 자유무역항이자 독립된 관세 지역이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

10 EU

□ **(EU 집행위원회)**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관련 대통령 메모에 대한 EU 집행위 공식 입장은 전무

○ 대통령 메모 발표 이후, EU 집행위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으며, EU 집행위원들의 SNS에도 이번 발표와 관련된 의견은 없음.

□ **(언론)** EU 내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은 상황

○ (영국 Financial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 대해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며, 지나치게 많은 국가들에게 WTO 개도국 혜택이 부여되어 세계 통상 질서가 피해를 입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보도

-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WTO의 분쟁해결제도나 개도국 지위 혜택 등을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WTO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WTO에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보도

○ 이외 벨기에 일간지 등 주요 언론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다룬 보도는 전무

Ⅲ 향후 전망

□ 이번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관련 발표는 미중 통상분쟁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겨냥한 압박용, 향후 미국의 WTO 탈퇴를 위한 포석, WTO 체제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다양한 견해 존재

□ 자기 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은 WTO 오랜 관행으로, 중국 및 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과 총의(consensus)*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는 WTO 체제에서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

* 총의(consensus)는 만장일치와 다르며 어떤 회원국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 회원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할 경우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음.

□ 단, 개도국 지위 부여 중단에 대해 미국 및 선진국들이 양자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농후

○ (미국) 브라질과 양자 협상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 도출('19.4), 터키('19.5) 및 인도('19.6)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 종료

○ (EU) 개도국의 자발적인 졸업제도 제안, 개도국 우대 조항의 적용 기한 설정 선호 입장

□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선진국에 필적하는 경제 발전에 따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선진국 의무 이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끝]

작 성 자

- 도하무역관 김주언
- 두바이무역관 오현탁
- 멕시코시티무역관 공소연
- 베이징무역관 윤보라
- 브뤼셀무역관 윤희정
- 싱가포르무역관 이효봉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이스탄불무역관 홍태화
- 쿠웨이트무역관 박성우
- 홍콩무역관 박희연
- 통상지원팀 김미옥
- 통상지원팀 이주미

Global Market Report 19-092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주요국 동향 및 현지 반응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9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통상지원팀 (02-3460-7513)
I S B N | 979-11-6490-026-8 (9532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Global Market Report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